

미국과 일본의 감세정책: 과거 사례 등으로 본 시사점

최호상 | 전문위원(3705-6229)

- [검토 배경] 미국과 일본에서 시행 또는 추진 중인 감세의 정책 효과는 재정건전성과 양립 여부에 따라 공과가 좌우될 전망이다. 이를 과거 사례 등을 검토하여 성장률과 금융시장, 중장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의 영향을 평가
- [주요 기관의 미국과 일본 감세정책 영향 평가] 감세정책은 양국 모두에게 성장률 상승, 소득 양극화 심화, 재정건전성의 위협 요소라는 평가에서는 일치
 - 미국 트럼프 2기의 감세정책이 담긴 OBBBA에서는 성장률을 높이는 데 유효. 일본의 경우에도 소비세율 영구 감세 시 승수효과(세율 인하와 재정지출이 소득, 소비, 투자를 유발하여 소득이 확대)가 클 것으로 기대
 - 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감세정책은 이전과 같이 소득 양극화 심화를 불러오며, 성장률의 동반 상승이 미흡할 경우에 중장기 재정건전성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지적
- [미국과 일본의 감세정책 과거 사례] 양국 모두 정책당국의 경기활성화 달성 등의 의도보다 재정불안이 커지는 부정적 영향이 심화
 - 미국의 1980년대 이후 감세정책을 시행한 정부(레이건, 2001년 집권한 부시, 2017년 트럼프 1기)에서는 긍정적 효과보다 국가부채 상승 등의 부작용이 모두 큰 편
 - 일본 정부의 주요 감세조치는 1994년, 1998년, 1999년에 추진되었고, 소득세의 세율인하 등이 시행. 이를 통해 구조적인 경기불황을 개선하려고 하였으나, 당초 의도했던 소비증가 등의 성과보다는 재정수지 적자 심화를 초래
- [시사점] 성장 잠재력 제고 등을 위한 재정정책과 그에 따른 국가부채 증가는 일정 정도 감내해야 하나, 과도한 부채의 급증은 대외신인도 하락과 그에 따른 후유증이 만성화될 소지
 - 과거 사례를 보면, 미국과 일본 모두 재정건전성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감세정책이 이에 상응하는 재원 마련 없이 시행될 경우, 단기에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동시에 재정부담으로 인한 지속적인 경제불안을 야기
 - 미국과 일본의 재정불안으로 인해 중장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어,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변동성 확산 등에 유의할 필요

- [주요 기관의 미국과 일본 감세정책 영향 평가] 감세정책은 양국 모두에게 성장을 상승, 소득 양극화 심화, 재정건전성의 위협 요소라는 평가에서는 일치
- 미국 트럼프 2기의 감세정책이 담긴 OBBBA에서는 성장률을 높이는 데 유효. 일본의 경우에도 소비세율 영구 감세 시 승수효과(세율 인하와 재정지출이 소득, 소비, 투자를 유발하여 소득이 확대)가 클 것으로 기대
 - CBO(의회예산처),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, Tax Policy Center, CBO 등 미국 재정 및 조세 관련 주요 연구기관들은 감세정책을 통해 2025~34년 성장률이 0.2~0.4% 상승하는 효과를 제시. 특히 단기 2년간 성과가 클 것으로 관측
 - 일본 내각부의 단기 거시계량모형에서는 소비세율을 2%p 낮출 경우, 1~3년차 GDP 성장률을 0.4%p 높여, 현금 지급 시 0.2~0.3%p보다 상승 효과가 높다고 추산²
 - 소비세율 인하(식료품 0%, 전품목 5%)가 소득효과를 통해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율에 미치는 효과는 영구 조치(1.73~5.10%)가 한시 조치(0.28~0.81%)보다 큰 편으로 추정³
 - Oxford Economics Global Economic Model로 산출한 결과에서는 식료품의 소비세율을 2026년 1월부터 0%로 인하할 경우, 실질 경제성장률과 물가에는 상당한 영향을 주지만, 이는 모두 1년에 그칠 것으로 예측⁴
 - 하지만 양국의 주요 기관들은 미국과 일본의 감세정책 부작용 중 하나로 지적된 소득 양극화 심화에서 같은 의견을 제시
 - CBO 추산에 의하면, 감세정책 이후 소득계층별 소득증가율이 2027년 상위 10%의 경우에는 4% 늘어나는 반면 하위 10%의 저소득층은 3% 감소한다고 분석
 - 소비세 감세를 통한 소득계층간 영향에서는 소비세율을 전품목 5%로 낮추는 경우에 최상위 소득계층(연간 소득 768만엔 이상)의 연간 세 부담 경감액이 44.3만엔으로 여타 계층 대비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
 - 일본은 소비세율을 모든 품목에 걸쳐 5%로 인하하면, 최상위 소득계층(연 소득 768만엔 이상)의 세 부담 경감액이 44.3만엔으로 여타 계층 대비 가장 높은 수준⁵
 - 이는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가구 구성원 수가 많은데다 더 많은 소비를 하므로, 세액이 줄어드는 폭이 크기 때문. 소비세율을 모두 품목에 5%로 적용하는 경우가 식료품만 0%로 부과하는 것에 비해 소비세 부담 경감액이 3배 정도로 추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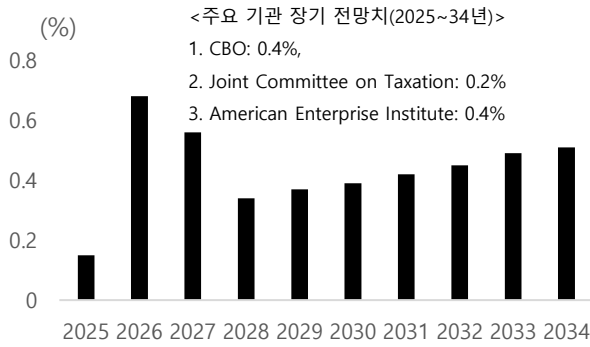
² 第一生命經濟研究所, “テーマ：消費減税と給付金の効果の違い”, 2025.4.

³ 日本総研, “消費減税、消費刺激効果の一方で課題も山積”, 2025.6

⁴ 明治安田総合研究所, “消費減税の効果は大きいが長続きせず”, 2025.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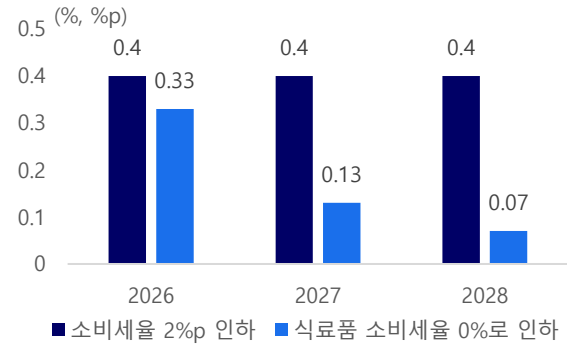
⁵ 大和総研, “参院選の争点である 家計支援策”, 2025.6

<그림 2> 미국 감세조치(OBBBA)의 성장률 영향 전망치



자료: Tax Policy Center(TPC) macroeconomic model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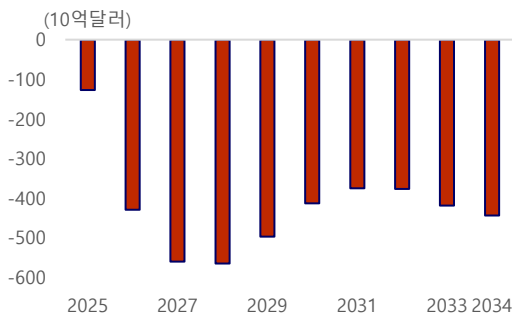
<그림 3> 일본 소비세 감세가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



자료: 내각부, 明治安田総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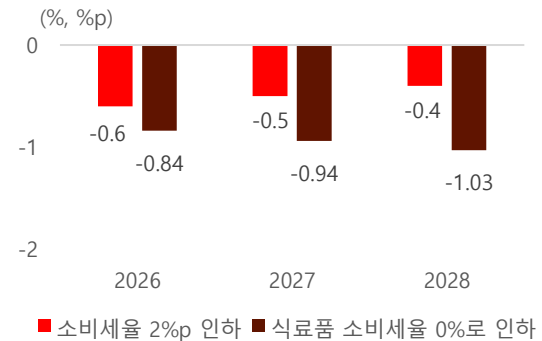
- 아울러 감세 조치는 성장률의 동반 상승이 미흡할 경우에 중장기 재정건전성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지적
 - 트럼프 2기의 OBBA 감세 영구화(여타 재정지출 등 제외)를 두고 CBO는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향후 10년간 재정수지 적자를 3.5조달러 발생시키고, GDP 대비 국가부채가 2034년 129%에 이를 것으로 예측⁶
 - 중장기적으로 감세정책의 지속성 여부가 불투명할 수 있어, 미국 내 설비투자과 산업발전이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성장률이 낮은 상태에서 정부의 재정이 더 악화될 우려가 상존하다고 지적
 - 일본의 식료품 소비세율 인하가 GDP 대비 재정수지 악화 정도를 보면, 내각부 단기 거시경제모형(2%p 인하)은 1~3년차에 0.4~0.6%, Oxford Economics Global Economic Model(0%로 인하)에서는 관련 비율이 0.84~0.94%로 추정

<그림 4> 미국의 감세조치가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



자료: CBO, Joint Committee on Taxation, TPC

<그림 5> 일본의 소비세 감세와 재정수지 영향



주: 재정수지는 GDP 대비, 자료: 내각부, 明治安田総研

⁶ CBO, "Preliminary Analysis of the Distributional Effects of the One Big Beautiful Bill Act", 2025.5, "Projections of Deficits and Debt Under Alternative Scenarios for the Budget and Interest Rates", 2025.3.

□ [미국과 일본의 감세정책 과거 사례] 미국은 성장률 제고의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양국 모두 감세정책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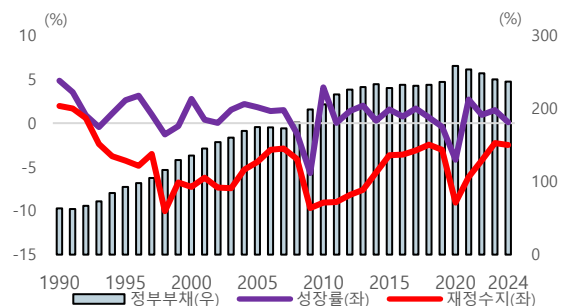
- 미국의 1980년대 이후 감세정책을 시행한 정부(레이건, 2001년 집권한 부시, 2017년 트럼프 1기)에서는 긍정적 효과보다 국가부채 상승 등의 부작용이 큰 편
 - 레이건 정부에는 관련 조치로 소비증가와 성장률 제고 등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 적자와 정부부채가 늘어나 재정 건전성 유지에 어려움을 겪었으며, 부시 정부에도 가처분소득 증가와 소비 증대의 효과를 거둔 반면 재정수지는 악화
 - 이는 세율 인하와 일부 세제 폐지 등이 고소득층에 더 많은 수혜를 부여한 반면 세수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
 - 트럼프 1기 정부에서도 코로나 19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세수가 축소된 반면 재정지출이 늘어,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다시 확대. 다만 이전 감세정책을 시행한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성장률은 비교적 양호
 - 반면 감세 대신 증세를 선택한 클린턴 정부에서는 재정수지 적자 축소를 경제정책 우선 과제로 선정하는 한편 지식기반산업 기반을 구축하여 재정건전성이 회복
- 일본 정부의 주요 감세조치는 1994년, 1998년, 1999년에 추진되었고, 소득세의 세율인하 등이 시행. 이를 통해 구조적인 경기불황을 개선하려고 하였으나, 당초 의도했던 소비증가 등의 성과보다는 재정수지 적자 심화를 초래
 - 정책 시행 당시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증가, 자산 디플레이션, 높은 저축성향 등으로 감세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가 소비로 연결되지 않았던 문제에 기인
 - 이로 인해 일본의 누적 국채발행액이 증가하여 정부부채와 재정수지 적자가 크게 늘어났고, 국채이자 지급을 위한 지출 확대와 적자재정의 산물인 국채상환 비용을 국채발행으로 충당하는 악순환을 답습

<표 2> 미국의 조세 조정 정부 집권기 경제지표 비교

	레이건 (1981~ 1988)	클린턴 (1993 ~2000)	부시 (2001~ 2008)	트럼프 (2016~ 2020)
성장률	3.5	3.9	2.2	1.5
재정수지	-4.1	-0.7	-3.5	-7.5
정부부채	40.6	62.1	62.8	113.2

주: 재정수지와 정부부채는 GDP 대비 비율,
자료: IMF, 각 지역 연방은행

<그림 6> 일본의 소비세 감세와 재정수지 영향



주: 재정수지와 정부부채는 GDP 대비 비율
자료: IMF

- [시사점] 경기 활성화와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재정정책과 그에 따른 국가부채 증가는 필요하지만, 과도한 부채의 급증은 대외신인도 하락 등 후유증이 만성화될 소지
- 과거 사례를 보면, 미국과 일본 모두 재정건전성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감세정책이 이에 상응하는 자원 마련 없이 시행될 경우, 단기에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동시에 재정부담으로 인한 지속적인 경제불안을 야기
 - 미국의 Tax Foundation은 트럼프 2기 감세정책 시행으로 2025~34년간 3.0조달러의 재정부담이 발생하며, 이는 감세로 얻게 되는 세수(1.7조달러)를 크게 상회한다고 분석. 이는 감세정책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중장기에 걸쳐 커질 수 있음을 의미
 - 1980년대 초 레이건 정부와 2001년 부시 정부의 감세정책 이론을 뒷받침한 공급경제학의 래퍼(Laffer) 교수는 부시 정부의 감세정책이 재정수지 적자 확대를 불러왔다고 비판한 반면 감세와 재정지출의 조절에 성공한 클린턴 정부의 재정정책에 긍정적 평가
 - 지난 5월에도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감세로 인한 정부부채 증가였음을 고려하면, 앞으로 국채금리의 상승 압력은 지속될 전망이다. 이는 금리에 민감한 주택경기과 설비투자 등을 위축시켜 세수 기반인 성장률에 부정적
 - 재정건전성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일본도 감세정책 시행 시 엔화가치 하락 가속화와 국채 매도의 불안이 우려. 특히 일본 국채의 해외투자자 보유 비중이 예전과 달리 13% 정도로 높아진 상태에서 집중 매도의 위험이 상존 우려
 - 향후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인상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높여 소비세 감세의 효과를 크게 상쇄시킬 가능성
 - 미국과 일본의 재정불안으로 인해 중장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어,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파급효과 확산 등에 유의할 필요
 - 2022년 영국 국채시장 위기는 국채금리가 재정건전성 우려에 반응하는 민감도가 커졌기 때문. 중장기적으로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재정부담이 커지는 양국 모두 국채시장 변동성이 급작스럽게 나타날 가능성
 - 단기간에는 관세정책의 금융시장 영향력이 크지만, 중장기에는 미국과 일본의 재정상황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을 수 있으므로, 이에 대비한 기초 경제여건 강화와 재정건전성 강화 등의 필요성 증대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,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. 국제금융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문의: 02-3705-6229 혹은 hschoi@kcif.or.kr, 홈페이지: www.kcif.or.kr